

## 자치경찰 7월 출범...기대·우려 교차

광주시·전남도, 6월 시범운영 앞두고 조례·조직 준비 본격화

행정 서비스 질 높이고 주민 요구 반영하는 밀착된 치안 제공

단체장과 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약화 '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

정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자치경찰 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시장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인 자치경찰 위원회가 사무를 총괄한다.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결정,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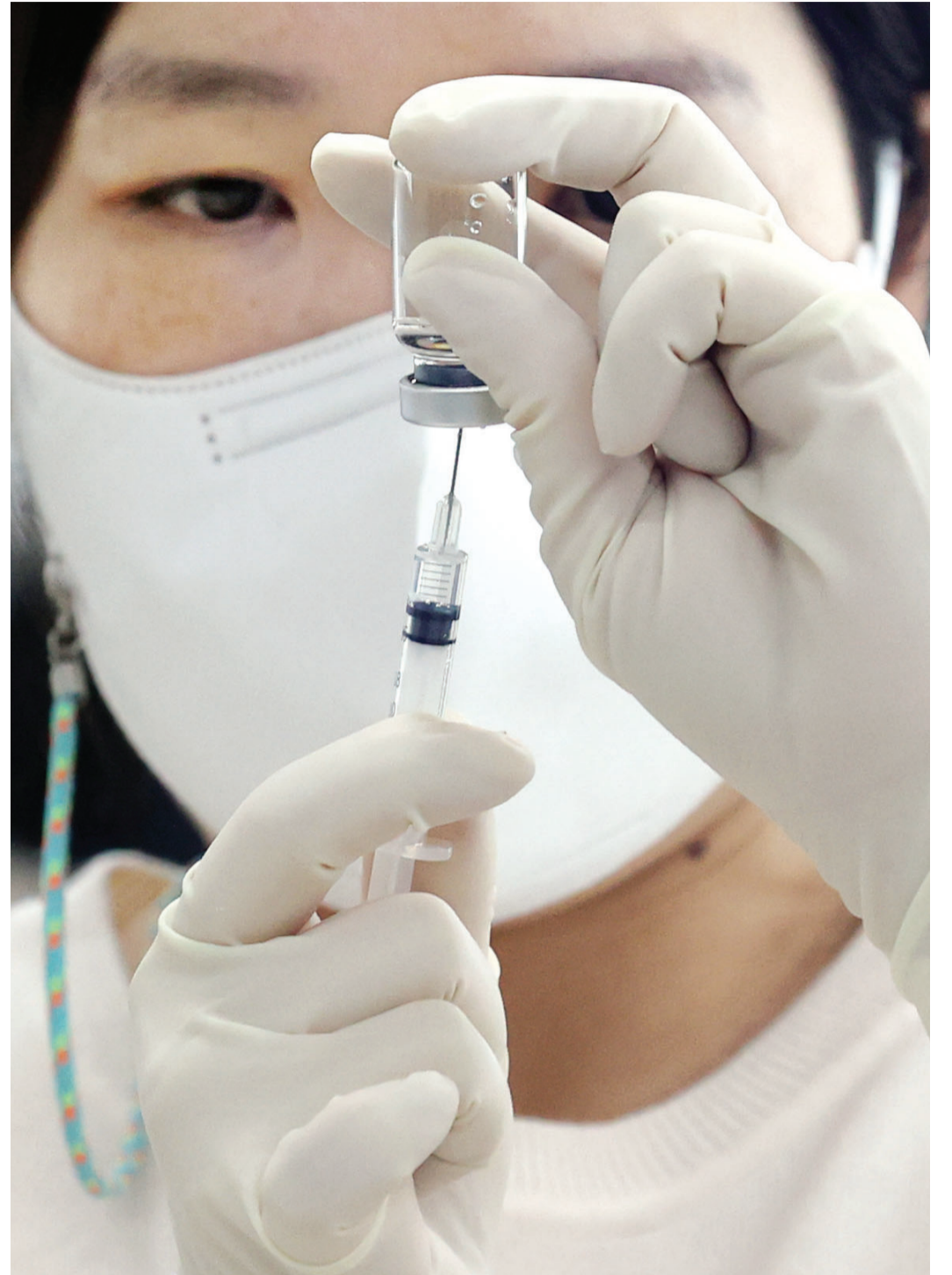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정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개정과 위원회 사무규 구성도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일단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이후 조직이 안정되면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상황은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전남도는 3월 중 자치경찰운영 관련 조례,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계획 아래 준비 중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4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국의 경우 2과 5팀 20명 수준으로 4월 중 구성을 마치고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출발점에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될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주시, 현행법 위반하며 부영주택 대변 이유 뭔가?”

골프장 잔여지 아파트 용도 변경 환경평가서 초안 제출 않고 공청회 환경청 관계자 “우리도 의아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 고층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 나주시가 골프장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나주시가 부영건설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까지 드러

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나주시가 당초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추진하던 공청회는 환경청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무산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단체가 언급한 공청회는 지난 3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열기로 했다가 취소된 '부영CC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말한다.

시민운동본부는 공청회 취소 이후 나주시가 전자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주시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부실투성이 13쪽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만으로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며 "환경청과 협의가 안 된 요약본만으로 공청회를 편법 강행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청과 협의한 초안 보고서 전체를 게시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물론 공공시설 부족 대책 등이 누락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로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부의 환경청 관계자는 광주일보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협의를 거친 초안 전체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청 협의를 거친 초안 보고서가 없는데 무슨 수로 공청회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청 협의를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뿐 아니라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자체가 나주시로부터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가 누구를 위해 급박하게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련의 나주시 행정을 볼 때 시민 대다수의 강력한 용도지역 변경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를 앞장서 대변하는 심부름센터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나주시는 "환경청 초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내놓은 땅을 제외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골프장 잔여지 35만㎡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전남 농어촌 벌써부터 일손 구하기 전쟁 ▶6면
- KIA 스프링캠프, 4 포수 '안방 싸움' 후끈 ▶18면
- 신 전남인 - 함평 석두마을 손성혜 씨 ▶22면

## 고령층 850만명 상반기 코로나 접종

문 대통령 "5~6월 예상"

정부 요인도 순서따라 접종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상 5~6월께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 "장애인, 노숙인 같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계신 분들,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상반기 중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반장은 특히 "정부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접종 순서에 따라 접종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통령님과 정부 주요 인사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종의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전체 접종 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월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초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850만여명으로, 올해 68세인 문 대통령의 경우 65세 이상 그룹 중에서도 후순위에 속한다.

다만 정 반장은 "접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수순번하는 게 필요하다면 향후에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여지를 뒀다. 상황에 따라 접종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반장은 이어 2~3월 1차 접종계획에서 빠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4~5월께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4~5월 사이에 들어오는 다른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고령층은 애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으로 인해 보류된 만큼 다른 일반 고령층보다는 먼저 백신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령 고도 세라마이드 농도 및  
많은 수분 함유 성분 함유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연령 2019.09.16~10.17 권장량) (피부 타입) 연구자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